

보수우파 결집 반등...양당 오차 범위 내 접전

여 "내란공범 몰더니 후퇴" 국회 과방위서 내란죄 설전

KOPRA 여론조사서 여 38.8% 야 33.7% 집계 대구·경북 53.3% 최고...39.6% "윤 대통령 지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보수 우파 결집으로 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결과 국민

의힘 정당 지지도는 38.8%, 민주당 33.7%로 집계됐다.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5.1%포인트(p)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3.3%), 부산·울산·경남(43.0%)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0.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43.6%의 지지율을 기록, 31.1%를 얻은 민주당보다 12.5%p

앞섰다. 인천·경기에서도 국민의힘 36.9%, 민주당 35.9%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이 60대(47.2%), 70세 이상(57.4%)에서, 민주당은 40대(40.5%)와 50대(43.0%)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4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물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6%

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70대 이상에서 56.6%, 60대에서 40.8%를 기록했다. 18-29세에서 39.6%, 30대에서는 42.2%의 결과를 보였다. 40대 29.8%와 50대 31.6%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응답률은 5.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운 기자
pkj@idaegu.com

여야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 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와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을 다루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혜림 기자 hlh@idaegu.com

"공수처 본말전도 궤변 막자" 국민의힘 60명 한남동 집결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에 공수처 체포시도 불법 강조 "집행권한 경찰 일임 상황 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60여 명이 6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이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및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불법'이라 주장하며 관저에 모여 물리적인 '윤석열 대통령 사수'에 나선 것이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재진에게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의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히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영장 집행을 방지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한 적이 있는지를 두고는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이날 오후 의원들 상당수는 관저에서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은 "당장은 영장 집행하러 올 인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일단 철수하겠다"며 "국회와 주변에 있다가 상황이 생기면 다시 집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전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여 있다. 연합뉴스

홍 시장, 내란죄 제외 두고 "짜장면 짜장면"

탄핵 핵심 제외는 무효 귀결 주장 "현재는 정국 혼란 방지 말아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나"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도 무효이고 윤 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직무정지도 무효이고 한덕수 총리 직무 정지도 무효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국 혼란을 마냥 방지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받아 들여 나라를 정상화시켜 놓고 향후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그게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현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제 현재가 더이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앞

잡이 기관이라는 오명은 쓰지 말았으면 한다. 나라부터 정상화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여권 주자인 홍 시장은 또 다른 글에서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개진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책을 출간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곧 페이스북을 정리한 책이 두 권 나올 예정"이라며 "1권은 '정치가 왜 이래' 이고, 2권은 '꿈은 이루어진다'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책에는 내 나라에 대한 나의 꿈, 나의 생각이 묻어나 있고 내 정치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며 "페이스북은 내 정치 일기"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hlh@idaegu.com

신문 읽는 오늘 더 지혜로운 내일

매일 매섭게 - 때론 부드럽게 - 신문은 빠르고 빠른 보도로 당신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만난 당신의 신문이 내일을 앞서가는 힘이 됩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